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 변경, 과도한 경영간섭”

대한상의·경총 등 6개 경제단체  
“기업가치 위한 대화 ‘수탁자 의무’  
대표소송, 건전한 대화목적 넘어  
결국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경제계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이동근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유일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탁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금운용본부 외에 대표소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금위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탁위는 기금위의 심의·의결 안전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engagement)”라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역시 국제적 망신을

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다양한 위협이 가능해진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앞서 의견 수렴도 없었던 만큼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연금의 기업 대상 소송이 남발되거나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도 ‘경연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내달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 차관님이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양차관도 이날 논의 후 “경연계에서 문제점을 말씀해주셨고 잘 경청했다”며 “서로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은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 신규 확진자 6603명... 주간평균 7000명 뚨 ‘대응단계’

보건복지부, 오미크론에 확산세  
기존 3T 전략서 ‘대응단계’ 되면  
중증환자 관리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7일만에 6000명을 넘어서며 확산 추세로 접어들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

자가 발생한 지 꼭 2년만인 20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13일)보다 2439명 늘어난 규모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일 3857명 이후 18일 4070명, 19일 5805명, 20일 6603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에 근접하며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대응 단계로의 전환 기준을 신규 확진자 7000명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도 당장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000명은 물리적, 기계적인 기준이 아니다. 수요일에서 금요일에 올랐다가 일요일부터 화요일 떨어질 수 있다”며 “일일 평균 7000명 수준으로 추세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전환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직 의료 대응 체계 여력이 있고, 대응 체계 전환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88명으로 62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갔다. 위중증 환자 수는 22일째 지속 감소 추세다.

손 반장은 “진단검사나 의료체계에서 7000명을 넘어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PCR검사는 하루에 70만건 정도 할 수 있고, 하루 평균

45만건이 이뤄져 25만건 여력이 남는다.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30%라 70% 정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일주일 평균 7000명을 넘으면 ‘대응 단계’로 본격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445.6명으로, 직전주(1월7~13일)보다 1114명 늘어났다.

‘대응단계’가 되면 기존의 ‘3T 전략(검사-추적-치료)’에서 중증환자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고령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 항원검사를 확대한다. 또 급증한 확진자의 진단과 치료에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검출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되고, 설 연휴를 지나는 3주 동안 80~9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 생산자물가 6.4% ↑... 10년만에 최대치

한은, 202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13개월 상승 뒤 보합... 전년비 9% ↑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6.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6.7% 상승 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3.22(2015년 100 기준)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오른 뒤 보합을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9.0%나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농림수산물(5.2%) 및 수산물(1.8%) 등이 올라 전월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도 석탄 및 석유제품(-6.7%), 화학제품(-0.6%) 등을 중심으로 0.6% 하락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가스, 증기 및 온수(5.2%) 증가에 따라 전월보다 1.6% 상승했다. 서비스도 음식점 및 숙박(1.0%), 운송(0.5%)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